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 평화

11월 11일 모두 시청으로!

» 관련기사 3면

일시: 11월 11일(일) 오후 3시 30분

장소: 서울시청 앞 광장

주최: 2007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위원회

노동자대회 전야제 11월 10일(토) 오후 7시 / 홍예버 상암점 앞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1일(일) 오후 1시 / 서울시청 앞 광장

2007 범국민
행동의날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 권영길의 '만인보'와
범국민행동의날
- 문국현과 가치 연대해야 하나?
6~7면

이명박과 BBK 게이트

2면

이라크 파병 재연장 반대

3 · 12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에서 재조명 받는 맑스주의
4면

존 몰리뉴 칼럼

- 맑스주의는 경제결정론인가?

11면

세계적 식품 가격 폭등

9면

국제

- 터키의 이라크 북부 침공 위협

- 부시의 막가파식이란 제재

5면

유류세 논란

4면

국정원의 추악한 과거

7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프랑스 파업
사르코지의 연금 개혁에 맞선 철도
노동자 파업을 평가하며 이후 반사
르코지 투쟁의 과제를 전망한다.

홍예버 면목점 집중 투쟁 보고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인용해도 될까요?”

“왕실의 존재 이유는 그저 일어
나서 먹고 자는 것을 1년 3백65
일 반복하는 것이다.”

— 일본 왕실 친왕
도모히토의 솔직한 고백

“메가스터디는 강사가 좋으니 많
이 모여 들지만, EBS는 강사에
문제가 있다. … 사실 돈으로 해
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 이명박

기자: “MAF 펀드 회장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명박: “무슨 말이나. 지금 [마포]
해장국집 얘기를 하는 것이냐?”

— 이명박의 뻔뻔스러운
판청 피우기

“암살이나 테러, 또는 큰 질병 등
으로 유고 상태가 됐을 때 현재
선거법으로는 대체후보를 낼 수
가 없다. … 이[회창] 전 총재가
등록을 해놓으면 일종의 ‘스페어
후보’가 되는 거니까. … 노무현
정권의 대공방어망이 약하기 때
문에 그 가능성은 비록 낮더라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 극우의 조갑제의 망상

“국립국어원이 신조어라고 밝힌
‘놈현스럽다’는 ‘기대를 저버리
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는 뜻
인데, 이는 2003년 판이고 2007
년 판에는 ‘뒤통수를 치고 사기를
잘 친다’로 바뀌어 할 것”

— 김광일 파병반대국민행동
기획위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조금
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 ‘비정규법이 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노동부 차관 노민기의 답

이명박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로

이명박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했던 박근
혜의 지적이 갈수록 현실에 가까
워지고 있다. 폭탄의 뇌관이 되고
있는 BBK 게이트에서 하루가 멀
다 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며
이명박이 BBK 게이트의 몸통이
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BBK 게이트는 이명박과 김경
준이 공모해 소액투자자들 5천2
백여 명에게 6백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힌 금융 사기극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박
탈당했던 이명박은 2000년에
김경준과 함께 사이버금융지주
회사 LKe뱅크와 투자자문화사
BBK를 만든다. “한국에 없는 새
로운 시스템과 기법을 제시”하겠
다는 것이었다.

많은 소액투자자들이 이명박
을 믿고 여기에 투자했다. BBK
는 외국 기업이 투자한다는 설을
퍼뜨려 주가를 8배나 끌어올렸
고, 이때 김경준은 3백84억 원을
들고 튀었다. 횡령으로 BBK가
상장 폐지되자 소액투자자들은
쪽박을 찔고 자살한 사람도 있었
다. 금융 사기의 “새로운 시스템
과 기법”을 선보인 셈이었다.

추악한 BBK 게이트의 실체
와 함께 이명박의 더러운 거짓말
들도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은
“BBK 주식 1주도 가져 본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MBC·〈중앙
일보〉와 했던 인터뷰, BBK 투자
자였던 하나은행의 내부품의서
등이 공개되면서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이명박 대선 캠프에 참가
하고 있는 최측근 김백준과 이진
영이 당시 BBK와 LKe뱅크에 포
진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명
박과 BBK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BBK와 관련된 주가 조작,



이명박이 BBK의 돈세탁에 동원된 MAF펀드 회장임을 보여주는 브로셔

돈세탁 등 온갖 부정·탈법의 중
심에 이명박이 있었던 것이다.

〈한겨레〉 여론조사를 보면
BBK 게이트에 대한 이명박의
해명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사
람은 고작 22.8퍼센트다. 경기
도·30대·학생 등의 부문에서
최근 열흘 사이 지지율이 8퍼센
트 넘게 떨어져, 지지층 균열 조
짐도 나타나고 있다.

연쇄 폭발

김경준이 대선 전에 귀국할 가
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BBK를 둘러싼 이명박의 위기가
더 심화할 것이다. 더구나 BBK 게
이트는 자금 흐름상 이명박의 도
곡동 땅 매각 대금 문제와도 얽혀
있어 ‘연쇄 폭발’ 가능성도 있다.

온갖 비리 의혹 때문에, 총재산
이 3백30억 원이라 신고한 이명
박의 실제 재산이 8천억 원에서
심지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소문
이 떠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
자인 이명박이 건강보험료와 산
재보험료 탈루를 밥먹듯이 해 온
것도 기가 막힌 일이다.

더구나 이명박의 발 밑에는 천

호동 개발 특혜, AIG 특혜, 상암
동 DMC 특혜 등 앞으로 ‘터질 폭
탄’들이 준비하다.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만도 20
가지가 넘는다. 부패와 비리로 인
한 ‘유고’ 가능성 때문에 일부 우
익들은 이회창을 대안으로 생각
하는 듯하다.

‘걸어다니는 비리 백화점’ 이
명박이 지금까지 버텨온 데는 보
수 언론의 비호가 큰 도움이 됐
다. 〈조선일보〉 출신 한나라당 뉴
미디어분과 간사 진성호는 “포털
에서 이명박 후보에 불리한 기사
가 안 올라간다고들 하는데, 내가
밤새 전화 걸어서 막았다”며 무
심코 진실을 내뱉었다. 조중동 같
은 ‘이명박 찌라시’들은 알아서
보도 통제를 해 왔다. ‘권력의 심
부름센터’ 검찰의 직무유기도 한
몫했다.

철두철미하게 친제국주의·신
자유주의적인 이명박의 이념과
정책은 둘째 치고라도 이런 ‘오물
투성이’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 자체가 년센스다. 이명박이 가
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
소다.

주명호

학자금 대출

돈 없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사회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를 보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시행
된 지 5학기 만에 1백3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만기 20년짜리 정부 보
증 학자금 대출에 전국 대학생
31만 3천8백 명이 몰렸다. 이는
전체 재학생의 14퍼센트에 이
르는 수치다.

그런데 올해 2천5백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대출금과 이자
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
다. 지난해보다 24배나 많아진
것이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연체해 대출을 거부당한 사례도
지난해보다 4배나 늘었다.

서울 사립대의 한 학기 등록
금은 평균 5백만 원에 육박한
다. 정부 학자금 대출에 실낱같
은 희망을 걸고 대학에 입학하
더라도 가난한 대학생들은 평생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
출인생’을 살거나 신용불량자
로 낙인찍혀야 한다. 학자금 대
출마저 거부당하면 학업을 포기
하거나 고리사채에 말려들 수도
있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을 늘려
가난한 대학생들이 걱정없이 공
부할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
원리금 상환도 취직 여부를 확
인한 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고려대 총장 어윤대의 “등
록금 1천5백만 원”, 고려대 경영
대 당국의 “등록금 2배 인상” 정
책이 현실화한다면 더욱 아만적
인 상황이 될 것이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나 돈 걱정 없
이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기 위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강영만

더는 죽이지 마라-사람 대접받고 싶었던 한 노동자의 죽음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 분과
정해진 동지가 10월 27일 분신
사망했다. 지난해 경찰에게 맞아
죽은 하중근 열사가 잊혀지기도
전에 또 한 명의 건설 노동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더구나 이날
은 4년 전 이맘때 비정규직 차별
에 항거해 분신한 이용석 열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있는 날이었다.

건설 노동자에게 죽음은 낯선
것이 아니다. “건설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흙더미에 깔려 죽
어도 보았다. 자재에 맞아 죽어
도 보았다. 기계에 밟혀, 건물에
서 떨어져 죽어도 보았다. 공권
력에 맞아 죽어도 보았다. … [그
리고] 이제 스스로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 죽어”
(전국건설노조)간 것이다.

전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그야말로 지옥같다. 근로기준법
은 먼 나라 얘기고 하루 13시간
씩 일하며 혹사당한다. 전봇대,
철탑 등을 오르내리며 배전 공사
를 하는 전기 노동자들은 감전,

추락 등에 노출돼 있다. 특히 “2
만 볼트 이상의 전기에 감전되면
순간 7천 도의 열이 발생해 팔
다리가 잘리거나 목숨을 잃는 게
부지기수”다.

2만 볼트

이 때문에 인천 지역 전기 노
동자들은 노조를 건설했고 6월
19일부터 4개월 넘게 파업하며
주 44시간 노동과 토요일 격주
휴무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람
대우해 달라”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 탄압과 노조
파괴 공작이었다.

탄압의 선봉장은 바로 영진전

업 사장이며 전기공사협회 간부
인 유해성이었다. 이 자는 “너네
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돈
의 위력을 보여 주겠다”며 용역
강패를 동원해 폭력을 휘두르고
단협 체결을 거부했다. 고소·고
발과 손배가압류도 휘둘렀다. 자
기 형과 사촌을 간부로 둔 어용
노조(한국노총 소속)를 만들어
노조 파괴에 이용하기도 했다.
결국 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탈
퇴하거나 어용노조로 옮겨갔다.

특히 10월 19일 새벽에 한국
노총 조끼를 입고 천막 농성장에
들이닥친 용역 강패들은 정해진
열사와 동료들을 무자비하게 폭
행했다. 결국 이런 폭력과 탄압

이 20년 동안 전기 노동자로 일
해 온 정해진 열사를 절망과 죽
음으로 몰아간 것이다.

열사는 온몸이 타 들어가는 순
간에도 “동지들 힘내라”, “파업 투
쟁 정당하다”고 외쳤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끝없이 “유해
성을 구속하라”고 외쳤다고 한다.

살인자는 바로 유해성이고,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착취한 한
국전력이며, 노조 탄압을 방조
한 노동부와 경찰이며,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다. 배신적인 한
국노총 지도부도 책임이 있다.

건설 노동자들이 사람 대접받
을 수 있는 세상, 모든 비정규직
차별이 사라진 세상을 위한 강력
한 투쟁과 희망을 건설하는 것이
열사의 뜻일 것이다.

전지윤



“서울 도심을 대중의 물결로 덮어버리자”

오는 11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한미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행동의날’(이하 범국민행동의날) 대회가 열린다.

전국 각지에서 십수만 명이 모일 예정인 이 대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반전·반신자유주의 쟁점들을 제기할 것이다.

한미FTA는 정부가 이미 체결했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히 40퍼센트에 이른다. 특히,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와 전제 조건이라는 광우병 의심 쇠고기 수입 허용에 반대하는 여론은 75퍼센트가 넘는다.

노무현은 한미FTA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노동시장 유연화,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서비스 악화를 낳을 공기업의 사기업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 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실상이다.

‘한미FTA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노무현의 주장도 황당하다. 한미FTA는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통계청이 발표한 것을 보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후인 지난 1년 동안에도 비정규직이 24만 명 이상 증가했다.

비정규직 악법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내쫓는 법이라는 사실은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투쟁에서 잘 드러났다.

지난 9월 <한겨레>의 여론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79.1퍼센트가 찬성했다. 범국민행동의날은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장이 될 것이다.

노무현 집권 내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또 하나의 쟁점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다. 올해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고한 한국인 두 명이 파병 정책의 속죄양이 됐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10월 23일 직접 나서서 자이툰 부대의 파병 재연장 대국민

답화를 발표했다. 압도적 반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여전히 악랄한 전쟁 범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결국 파병 재연장 문제는 기성 정치권 대선 후보들을 편 가를 만큼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매

범국민행동의날은 한미FTA가 낳을 재앙을 우려하고,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고, 학살 지원 파병에 반대하는 한국 사회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또, 이 집회는 파병 재연장안을 부결시키도록 국회를 압박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벌어질 수 있는 한미FTA 국회 비준 저지 투쟁을 위한 동력을 다지는 대회가 될 것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십수만 명이 대중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매우 멋진 일이다.

선관위는 범국민행동의날이 이 대회의

기치를 일관되게 옹호해 온 권영길 후보에 대한 지지 상승으로 이어질까 봐 ‘불법’ 시비를 걸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만인보’를 하며 전국의 노동자·민중에게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농 등도 범국민행동의날에 더 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현장을 독려하며 버스·기차 승차권을 예매하고 있다.

10월 27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람 대접해달라”며 분신자살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투쟁의 희망을 보여 주자. 권영길 후보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11월 11일 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우리들의 물결로 덮어버리자”고 호소했다.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은 우리의 고통과 분노를 쏟아내고, 대중의 힘을 보여 줌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

이정구

10.28 한미공동 반전행동



미국
10만 명 이상이
이라크 점령 종식을 외치다

10월 27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내 10여 개 대도시에서 10만 명 이상이 ‘10.27 이라크 전쟁 종식 전국 시위’에 참가했다.

미국의 10.27 집회는 집회 규모나 분위기 모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다.

시위대는 “월스트리트가 배를 불리는 동안 이라크인과 미군 병사들이 죽어간다”, “폭탄이 아니라 학교 수업료를 떨어뜨려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라크 점령 종식을 요구했다.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반전 집회들에 참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의 참가가 돋보였는데, 노조 활동가 샤론 코뉴는 “갈수록 많은 조합원들이 우리 학교·교통·의료 체제에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대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했다. 10월 27일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의회에서 이라크 침략을 승인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다.

‘절규하는 군인 가족들’(The Military Families Speak Out)의 앤 뢰슬러는 “이라크 전쟁은 의회 승인을 받았다. 의원들은 손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이라크인 들의 피로 정치적 입신출세를 추구했다” 하고 비난했다.

또, 샌프란시스코 집회에서 신디 시헌

은 내년 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라크 침략을 지지한 민주당 낸시 펠로시 대신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며 민주당에 독립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자고 호소했다.

한국
“이라크 점령을
한국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



10월 28일 서울역에서 진행된 ‘한미공동 반전행동’에 7~8백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 파병 연장에 대해 분노를 토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전 집회에 처음 참가했다는 단국대학교 신입생 장진혁 씨는 “한국 정부가 국

민과의 약속을 어겨서 분노가 치밀었고,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편만 드는 것이 싫어”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분노를 반영해 연사들은 매우 급진적이고 속 시원한 주장을 펼쳤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 이라크 점령에 한국이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미군 점령을 몰아내기 위한 이라크인들의 해방 전쟁의 편에 설 것인가, 미국 침략전쟁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하고 말했다.

‘다함께’ 김하영 운영위원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라크에서 미국을 도와야 한다는 노무현의 주장을 반박했다. “츄츄기가 말했듯이 부시는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택한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인들의 저항에 빚을 지고 있다. 파병 연장은 배은망덕한 짓이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도 참가자들 대부분이 집회 뒤 행진에 함께해 정부의 파병 연장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부산에서도 1백50여 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자이툰 파병 연장 반대와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 실현, 10.4 정상 선언 이행도 촉구했다.

중국에서 새롭게 조명받는 맑스

중국은 항상 서방 자본주의의 마지막 변경이었다. 18세기 후반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처음으로 중국 시장에 침투한 이래로 서방의 수출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구입할 엄청나게 많은 소비자들이 이 고대 문명에 숨어 있다고 꿈꿔 왔다.

이 꿈 —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통합되는 바람에 빈곤해진 사회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 때문에 미국은 20세기 중반에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투쟁에 점차 단호하게 뛰어들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말이다. 오늘날 중국은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 세계 경제에 아주 중요하다. 중국은 값싼 공산품을 세계 시장에 마구 쏟아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주에 중국을 잠시 방문한 나는 30년간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변모한 도시들을 보았다. 그런 도시에 즐비한 가게들에서 낯익은 서방 브랜드들을 죄다 볼 수 있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한 날은 우연히도 중국공산당 17차 전대 마지막 날이었다. 공식 영어 방송 채널에 나오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거만한 사열 장면과 다른 여러 채널에서 방영되는 오락 프로그램, 연속극, 할리우드 영화 따위의 대조적인 모습은 초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사실, 중국 사회의 모순들은 중국공산당 지도부에게 아주 중요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중국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고 여전히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세대 동안 중국을 압도한 위험천만한 자본 축적 과정 때문에 엄청난 불평등이 형성됐다. 중국 연안 지방과 다른 지방 사이의 빈부 격차는 특히 두드러진다.

내가 귀가 따갑게 들은 한 가지 문제는 아직도 중국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촌 주민들의 곤경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

중국 상하이의 쇼핑물 주변 빈민가 — 엄청난 불평등이 형성된 “중국식 사회주의”

20년 동안 그들은 생활수준이 정체했음에도 농촌을 떠나 자유롭게 이주할 권리가 없다.

모순

많은 농민들이 불법적으로 도시로 가서 1억 명이나 되는 중국의 이주노동자 군대에 합류하고 있다. 그들은 최저비용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해 착취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고, 흔히 공안에 체포돼 고향인 농촌으로 쫓겨나기 십상이다.

17차 전대에서 주석 후진타오는 이런 모순들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려 했다. 그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중국공산당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면서도 당이 “조화로운 발전”과 “인민 우선” 정책에 전념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사회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후진타오는 말했다.

이런 긴장은 중국의 지적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가 중국을 방문한 이유는 맑스주의 학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몇 년 전이라면 이런 행사가 지금처럼 흥미를 끌지 않았을 것이다. 옛 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맑스-레닌주의는 공식 이데올로기였고, 흔히 독창성도 없고 교조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교과 과정

의 필수 과목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바뀌고 있다. 일부 지식인들은 맑스주의, 더 일반적으로는 서방의 급진적인 좌파-리버럴 사상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관심 가운데 일부는 순전히 학술적 관심인 듯하다. 나는 최근 사망한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스트 저술가 장 보드리야르가 중국에서 인기를 끄는 듯한 것을 보고 약간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더 비판적인 맑스주의와 자유주의 경향에 대한 실질적 관심도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공산당 통치 하에서, 특히 마오쩌둥 집권 시절(1949~76년)에 중국이 겪은 엄청나고 흔히 폭력적인 투쟁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분석 도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려는 욕구도 존재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맑스를 쓸모없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아이콘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 있는 비판적 사상가로 달리 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1980년대 말 옛 소련과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정권들의 무너지던 시기의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그 때는 지식인과 노동자 등이 모두 맑스주의를 믿지 못할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치부하면서 서방 시장 자본주의의 이상화된 형태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시장 자본주의가 공산당 정권과 수십 년 동안 공존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이 《자본론》의 저자 야말로 자본주의로 뒤집히고 있는 나라에 가장 훌륭한 지침을 제시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이고,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국내 번역된 주요 저서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과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책갈피) 등이 있다.

유류세 인하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2006년에만 23조 5천억 원이 걸린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는 그렇지 않아도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등은 앞다퉈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문국현도 한때 유류세 30퍼센트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기름값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류세 10퍼센트 인하를 주장한 한나라당과 20퍼센트 인하를 주장한 통합신당의 행태가 “인기영합주의적”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비판은 완전히 정당하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석유 회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기 위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무시

해, 높은 기름값에 한몫하고 있는 정유사의 폭리를 사실상 옹호해 왔다.

또,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은 유류세 인하를 주장하지만 이를 대체할 세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이 법인세 인하 등 부자와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줄여 온 점을 고려하면 “현실에서는 또 다른 간접세가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삼모사’인 셈이다.

문국현도 유류세 인하의 대안으로 또 다른 간접세인 ‘환경세’를 주장했었다.

친환경

그런데 그동안 간접세 축소와 부유세 도입 등 세금 제도 개혁을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이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노동당은 정유사들의 폭리를 막고 저소득 계층이나 자영업자 등의 유류세는 환급해 주자는 대안을 제시하지만, 주로 노동자들이 유류세를 낸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더욱이 현행 유류세는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적 대중교통 확대 등이 아니라 석유 소비를 유도하는 데 쓰여 왔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들은 유류세로 걷은 돈을 환경 개선·재생에너지 개발·대중교통 확충 등에 제대로 쓰자고 주장한다. 지구온난화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석유 사용을 대폭 줄이는 친환경적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옳다.

그러나 이 비용은 노동자·서민이 아

니라 석유·자동차 기업처럼 ‘석유 과소비 사회’에서 이득을 얻어 온 부자들이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값을 인상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만들겠다는 발상은 가난한 사람들만 불편을 감수하라는 것이 될 수 있다.

기름값을 올려 소비를 줄이겠다는 시장주의적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않다. 기업들은 기름값 상승 부담을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어 친환경적 체제 전환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친환경적 체제로 시급히 전환하려면 기름값을 올리는 시장주의적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간접세가 아니라 부자들에게 물려야 한다. 그럴 때 친환경적 체제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광범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미국이 터키에게 쿠르드 저항 분쇄를 약속하다

사이먼 아사프

미국이 터키에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저항 운동 분쇄를 약속했다. 쿠르드족 저항 운동은 터키 동부에서 쿠르드족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라크-터키 국경 부근에서 쿠르드족 전사들과 잇따라 무장 충돌을 한 데 이어 터키는 이라크 북부를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쿠르드노동자당(PKK) 산하 게릴라 조직의 습격으로 터키 병사 적어도 12명이 사망했다.

터키는 군사동맹인 NATO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터키는 국경에 10만 명의 군대를 집결시켰다. 최근 터키는 PKK의 휴전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미 국무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터키가 이라크 침공을 보류한다면 미군이 PKK 저항세력 분쇄를 위한 “신속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은 터키의 군사 행동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자신의 동맹들, 즉 쿠르드애국동맹(PUK)과 쿠르드민주당(KDP)을 위기에 빠뜨릴까 봐 두려워한다. 두 당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의 핵심 지지자들이다.

4천만 명에 이르는 쿠르드족은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에서 꽤 큰 규모의 소수민족을 이루고 있다.(지도를 보시오) 그들은 1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 지역의 국경을 맘대로 획정한 이래 독립운동을 계속해 왔다.

쿠르드족은 자신의 나라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민족이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끊임없는 시도들은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강화했다. 터키 내의 쿠르드족은 자기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다 체포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받는 등 수십 년 동안 억압받아 왔다.

탄압

PKK는 터키 군사정부 시절인 1984년에 군사조직으로서 등장했다. PKK는 게릴라 전쟁에 착수했지만 그 결과는 터키 국가의 잔혹한 탄압이었다. 4만 명이 죽고 마을 4천 개가 파괴됐고 4백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났다.

터키 남부에서 쫓겨난 뒤 PKK는 이라크 북부 곳곳에 임시기지를 설치했고, 게릴라 공격을 위해 주기적으로 터키에 잠



입했다.

PKK는 국경 지역과 터키 동부에 사는 쿠르드족들한테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의 습격은 터키 전역에서 반(反)쿠르드족 공세를 촉발했고 터키의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AKP)에 압력을 가했다. AKP는 최근에 치러진 선거에서 터키 내 쿠르드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것은 AKP가 쿠르드족 언어와 문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덕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 때문에 AKP는 터

키의 막강한 군부와 직접 충돌했다.

터키 군대가 이라크를 침공한다면 PKK 전사들은 주민들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월경(越境) 공격이든 터키를 이라크 수령에 빠뜨리게 될 지 지부진한 전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지역 내의 긴장은 미국과 동맹을 맺은 쿠르드족 정당들이 이라크 내 터키 민족, 즉 투르크멘을 공격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분쟁의 중심에는 많은 석유가

매장돼 있지만 [인종적으로] 분열돼 있는 키르쿠크 시의 통제권 문제가 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자 터키는 키르쿠크[의 통제권]에 대한 케케묵은 주장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러한 주장은 키르쿠크의 거주민 가운데 투르크멘이 다수라고 기록한 1950년대의 인구조사에 근거한 것이었다.

오늘날 키르쿠크는 꽤 큰 규모의 아랍족과 투르크멘 소수민족을 포함하긴 하지만 쿠르드족이 압도적으로 많다. 쿠르드족 정당들은 키르쿠크가 1990~91년 제1차 걸프전 뒤 수립된 쿠르드 자치지역의 일부가 될지, 이라크의 일부로 남을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는 이라크 북부 전체를 불안정에 빠뜨릴 인종적 내전을 부를 수 있다.

미국과 터키는 쿠르드족 자치정부에게 PKK 지도자들을 터키에 넘기라고 압력을 넣어 왔다.

현재까지 이라크 대통령이자 PUK의 지도자인 잘랄 탈라바니는 이라크의 쿠르드족 병사들은 이라크 저항세력을 분쇄하느라 너무 바쁜 나머지 PKK를 상대할 여력이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부해 왔다.

탈라바니는 아랍어 신문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PKK 축출을 위해 칸달 산악지대에 보낼 수 있을 만큼 병력이 충분치 않다. 우리 군대는 바그다드 거리의 치안을 유지하고 테러리즘과 싸우는 데 필요하다.”

사이먼 아사프는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로 중동 문제에 대한 뛰어난 분석을 제공해 왔다

이란 경제 제재

증거도 없는 부시의 막가파식 제재

부시 정부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10월 25일에는 이란이 이라크 내 ‘테러 조직’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방적 경제 제재 실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혁명수비대의 쿠드스군 관련 인물·기관과의 거래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부시 정부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예컨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모하메드 엘바라데

이는 10월 28일 CNN 인터뷰에서 “지금 구체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이 (이란에) 존재한다는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면서 미국의 제재는 단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부시 정부는 이란이 이라크 저항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도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모순이게도, 이라크의 친이란 정당들은 꼭두각시 정부에서 미군과 협력하고 있다.

설사 부시 정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더라도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자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도운 미국이 이란을 비난할 자격은 없다.

이라크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테러조직(미국 점령군)을 운영하고 있는 부시 정부가 이란의 저항세력 지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도 황당한 일이다. 더구나, 이라크 저항세력을 키운 것은 이란이 아니라 미군의 식민지 점령이라는 불의다.

부시가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는 중동 지역 경쟁자인 이란을 굴복시키고 이란에 이라크 점령 재앙의 책임을 떠넘기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압박이 가까운 미래에 군사 공격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중동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김용욱

이주노동자 단속 권한 강화를 막아야

지난 10월 11일, 고양시에서 이주노동자 단속을 막던 사업주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 조항을 전반적으로 강화한 결과다. 개악 출입국관리법은 단속 위기에 처한 이주노동자를 구출하는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

이 저항해, 다치는 단속 직원 수가 늘고 있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속반이 당하는 부상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당하는 부상이나 폭행에 비할 게 못 된다. 최근 한 중국 여성은 단속을 피하다 건물에서 떨어져 전신이 마비됐다.

법무부는 단속에 대한 항의 때문

에 공격적인 단속이 어려워질까 봐 단속반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이주노동자 단속 반대 운동도 겨냥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단속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위축시켜 더 손쉽게 이주노동자들을 잡아가려는 법무부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

이정원(이주노동자 교육선전차장)

제2회

여성노동영화제

‘고스트’

‘우리들은 정의파다’

‘우리는 KTX 승무원입니다’

‘2007 이랜드’

등 무료 상영

11월 3일(토)~6일(화)

홍대앞 상상마당시네마

www.38women.or.kr

권영길과 함께 범국민행동의 날 건설에 힘을 모아야



장호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범

국민행동의날 조직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과 전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만나 참가를 독려한 데 이어 영남 지역에서도 '만인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관위의 정치 탄압도 이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권영길 후보의 범국민행동의날 건설 노력을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레디앙〉은 범국민행동의날이 “원내 진출 전이나 진출 후나 똑 같은 방식”이고 “백만민중대회가 일반 서민들에게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한 출입기자들의 말들을 모아 “가장 낡은, 팔통 진보가 돼버린 정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처럼 대중 투쟁 건설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이데올로기이다.

“최근 집권한 중남미 진보 정권의 모습도 그렇고 프랑스판 비정규직 약법을 무력화시킨 힘도 국민들의 대규모 힘에 의한 것이다. … 국민들의 대규모 힘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히려 삶의 현장을 더욱 총만하게 한다.”(권영길, ‘손석춘의 오늘’ 인터뷰)

중요한 역사적 진보와 변화는 모두 아래로부터 대중 행동에서 비롯했다.

2002년 대선이나 2004년 총선 당시 사회 전체의 이데올로기 지형이 원점으로 이동해 민주노동당의 입지가 강화된 것도 여중생 압사 항의 시위와 탄핵 반대 시위 같은 대중 운동 덕분이었다.

〈레디앙〉의 주요 필자인 안태환 씨는 범국민행동의날이 “엘리트가 단상 위에 앉아 민중을 동원하는 방식”이라며 “거리의 민주주의 전략”과 대립시켰다. 그러나 권영길 후보가 전국의 마을과 공장을 돌아다니며 노동자·농민들을 거리로 나오도록 하는 것인데 구태여 “거리의 민주주의”와 대립시킬 필요가 있을까.

물론 권영길 후보가 지방에서 주로 농민들을 만나느라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와 이라크 파병 연장 반대 집회에 불참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비정규직 약법 통과를 도운 한국노



범국민행동의날을 비정규직 철폐 투쟁, 한미FTA 반대 투쟁, 파병 연장 반대 투쟁의 중요한 고리로 만들어야 한다

총 지도부를 찾아가 사과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 국노총이 정해진 열사의 죽음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을 쓰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들어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에 소극적인 태도

를 보이는 것은 의도와 달리 강력한 대중 투쟁을 조직할 기회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코앞에 닥친 대선보다는 내년 총선 준비에만 열을 올리는 당 내 일부 세력이나 ‘민주노동당이 우경화했다’며 권영길 후보에 대한 비판만 앞세우는 일부 조좌파들은

스스로 진보정치 성장과 대중 투쟁 건설 노력에 힘을 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꼬투리만 잡으며 한 발 물러서 있을 것이 아니라 비판할 것은 하더라도 대중 투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범국민행동의날 조직에 함께 힘을 쏟아야 한다.

권영길의 가치와 문국현의 가치는 다르다

손석춘 씨는 최근 ‘권영길과 문국현의 장군, 명군’이라는 글에서 “두 사람의 생각은 차이 못지 않게 공통점이 있다”며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겠다는 ‘가치 연대’가 참으로 절실한 오늘”이라고 했다.

‘새진보연대’의 이수호 대표도 〈매일노동뉴스〉인터뷰에서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후보단일화로 연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WTO 체제 하에서 FTA는 순리”라는 문국현과 FTA 반대 투쟁의 선봉장인 권영길의 가치는

다르다. “해와 파병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찬성해 왔다”는 문국현과 일관된 반전 후보인 권영길의 가치는 다르다. 문국현이 30억 원의 창당 자금을 내서 만든 창조한국당과 진성당원들의 당비로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의 가치는 다르다.

더구나 최근 문국현은 “[민주노동당] 기업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고 말한다. “10년 전이나 똑 같은” 민주노동당은 “보수화된 진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

교육 등 진보적 가치를 변함없이 고수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 이 가치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실현된 바 없는 신선한 가치들이다. 재산 1백37억 원을 보유해 부유세 과세 대상인 문국현에게만 ‘보수’로 보일 뿐이다. 문국현의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는 낡은 구호야말로 전형적인 보수적 가치다.

‘신자유주의는 반대하면서 FTA는 찬성한다’는 문국현의 가치는 “좌파 신자유주의”를 말해 온 노무현의 가치와 달랐다. 더구나 문국

현은 어제는 “나를 중심으로 [범여권] 단일화하자”더니 오늘은 “범여권 단일화에 관심 없다”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오락가락

이런 문국현과 ‘가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범여권과의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개혁 성향의 학자들이 주도하는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은 통합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이 “정책 경쟁”을 통한 진보개혁진영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는 문국현

의 후보단일화”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겨레21〉은 통합신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사회당이

중앙선관위는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중앙선관위는 ‘2007 범국민행동의날’ 개최를 홍보하거나 당일 행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연설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민주노동당에 통보했다.

이것은 권영길 후보의 말대로 “권영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범국민행동의날의 주요 요구인 한미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파병 연장 반대 등은 주류 정치권 두가 꺼려하는 한국 사회의 진정한 핵심 의제들이다. 선관위는 이것이 대선 의제로 떠오르는 것을 차단하려 한다.

그래서 ‘정당이 주도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당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선거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모호한 지침을 만들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탄압하는 것이다.

반면,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편드는 주류 언론과 이들의 입을 빌어 사실상 사전 선거운

동을 해 온 주류 정당들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대선미디어연대에 따르면 10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3대 방송사는 총 85건의 정당 보도 중 단 한 건만 민주노동당에 할애했다. 5대 일간지의 ‘후보자 정당별 노출 빈도’에서 민주노동당은 평균 3.2퍼센트만 차지했을 뿐이다.

선관위는 보수 언론이 이명박의 부정·부패 의혹을 정치공세로 치부하며 노골적인 이명박 팬들기를 할 때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범국민행동의날’과 함께 우익들의 NLL 사수 집회도 규제하겠다는 것은 구색 갖추기 일 뿐이다.

따라서 “나는 이미 지난 20년간 더 큰 탄압을 받아 왔고, 탄압을 받을수록 더욱 강해져 왔다”며 강행의사를 밝힌 권영길 후보와 함께 범국민행동의날을 더 크게 성사시켜 선관위의 협박을 무력화시켜야 한다.

“큰 틀에선 이전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며 “가치 및 정책 연대를 시도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썼다.

그러나 범여권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더 크다. 홍세화 씨가 지적했듯이 “이라크 파병, 비정규직 양산, 한미FTA 등 … 을 펼친 세력까지 ‘진보개혁세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억지로 범여권과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 반전·반신자유주의 핵심 가치들을 놓치게 될 뿐이다. 예컨대 ‘진보 개혁을 위한 의제27’은 한미FTA 반대를 의제에서 제외하며 “어떤 조건 하에서 비준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지”만 논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이 주도하는 ‘2007

전지윤

국정원의 추악한 과거는 끝나지 않았다

한규한

얼마 전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규명위)가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원의 전신인 옛 중앙정보부·안기부의 추악한 본질을 훑듯 보여 준다.

정보기관들은 독재 정권 유지에 핵심적 구실을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김대중과 같은 정적을 납치하거나 김형욱 같은 ‘배신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언론 사주를 매수해 언론을 통제했고 온갖 고문과 협박으로 각종 조작 간첩을 만들어 사회 분위기를 냉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고, 희생자들의 가족은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숨죽이고 살아왔다.

진실규명위 위원인 한홍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한다.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사람 가족 중에]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 동네 형들이 그 아이를 끌고 다니며 목매달아 ‘총살 놀이’를 했다더라. 간첩 새끼라고.”

매우 불충분한지 하지만 이번 보고서서 국정원이 과거에 아래로부터 저항을 억압하는 데 혈안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1983년 12월 안기부는 대학에서 6백84개의 ‘망조직’을 운영했다. 학교 주변의 자취집, 서점, 음식점, 인쇄소도 사찰 대상이었다.

안기부 요원들은 “태산이 높다 하되 대머리전두환을 가리킨의 밑 이보다” 하는 어느 음식점 화장실의 낙서까지 수집했다.

사찰

또, 안기부는 우파 학생 단체들을 육성하기도 했다. 1987년 안기부는 자금 지원, 취입 알선 등 온갖 수단을 써가며 20개 대학에서 92개의 “건전 서클”을 키웠다. 심지어 일부 학생 문제권의 좌경화 움직임에 대한 대책의견(1986년)을 보면 “일본에서처럼 유사시 극우파가 극좌파를 공격(테러 등)하거

나 ‘총격작 방법’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정보기관의 노동운동 사찰과 탄압은 훨씬 가혹했다. 급속한 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철저히 억눌렀다.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자들을 지원했던 도시산업선교회와 크리스천 아카데미 활동가들은 “빨갱이”로 몰렸다.

1961년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는 아예 대한노총을 해산하고 한국노총을 직접 만들었다. 한국노총 위원은 물론 각 산별위원장, 대기업 노조 위원장들은 사실상 중앙정



국정원이 여전히 ‘음지’를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 준 ‘일심회’ 사진

보부가 임명한 것과 다름없었다. 한국노총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경과하고 나서야 그나마 국가기구 성격에서 탈피해 상대적 우파노조로 변할 수 있었다.

안기부도 “본단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안 된다”며 민주노조를 건설하려는 활동가들을 모질게 고문했다. 안기부는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노동운동 탄압을 치밀하게 진두지휘했다. 그들이 써먹은 탄압 매뉴얼은 요즘에도 낯설지 않다.

“노사분규 주동 및 배후세력에 대항하는 구사 건전 대항세력을 육성하고 필요시 공작원으로 활용한다. 분규사업장 주변 주민대책회의를 조직하여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해 생업 지장, 사회 불편 등의 호소를 유도하여 비판, 규탄 여론을 조성하고 확산한다.”

안기부의 사찰과 탄압은 노동조합에 그치지 않았다. 진실규명위 보고서는 안기부의 사찰 대상에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노동자대학 등 공개 노동단체와 인노련, 서노련, 국제사회주의자들, <노동해방의 불꽃> 편집국 등 비합법 노조 지원단체와 정치적 노동운동 단체들이 모두 포함됐다”고 전한다.

그러나 역사가 입증하듯이 정보기관의 사찰과 탄압이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진실규명위 보고서를 보더라도 1980년대 안기부가 대학에서 벌인 억압과 사찰 행위는 학생 대중의 급진화를 차단하지 못했다.

1987년 6월항쟁이 폭발하기 직전 안기부가 작성한 〈서울대 총학 선거 관련 동향 및 대책〉을 보면, 선거 유세에서 “처음 등단한 ‘건전 학생’ 유세시 호응자 별무, 일부 학생 야유·조소 등으로 분위기 산만”이라고 보고했다. 반면 자민투 계열 학생은 가장 커다란 지지와 호응을 얻었다.

이 보고서의 ‘김대중 납치 사건’ 평가 부분을 본 김대중이 ‘유유부단한 평가’라고 했듯이, 진실규명

위의 보고서는 어정쩡하다. 국정원이 자신에게 치명적일 핵심 정보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했을 리도 없다. 또, 진실규명위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도 북한 공작원의 소행으로 단정되었지만, 핵심 인물인 김현희 등도 조사하지 못해 의혹을 잠재우지 못했다.

빙산의 일각

결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한홍구 교수도 “밝혀낸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다.

사실, 1980년대 학원 사찰에 앞장선 김만복이 처벌받기는커녕 현 국정원장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는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를 이번 보고서로 불식시키고 ‘테러방지법’ 도입 같은 ‘미래’를 도모하고자 한다.

김만복은 이번 보고서 발간사에서 “다시는 국민들이 공권력으로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른바 ‘민주 정부’에서도 억압기구들의 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정원의 ‘국내파트’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고, ‘일심회’ 사건에서 뺏듯이 진보진영에 대한 사찰도 중단되지 않았다. 온갖 야만적 박해를 낳았던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통해 오히려 사찰·탄압 영역을 넓히고 있다.

정보기관들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기도 하다. 대테러 전쟁을 구실삼은 시민권 억압,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 억압, 치열해진 시장 경쟁에서 기업 기밀을 둘러싼 ‘산업 전쟁’ 등이 정보기구 기능 강화의 토양이다. 한국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정보기관의 활동이야말로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억압이라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자유주의 정부에 만족하지 않아야 할 이유다.



지난 호를 읽고 ...

남북 정상회담이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율 정체의 중요한 객관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범여권이 수혜를 대부분 입고 있는데다 민주노동당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묻히고 있는 것 같다. 그동안 <맞불>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이 많은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곤 했는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사를 읽고 민주노동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됐다.

강철구

'오물투성이와 개혁사기꾼의 무가치한 논쟁' 기사는 문국현이 지지율을 생각해 범여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범여권과 후보 단일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얘기 같다. 상황에 따라서는 문국현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근 문국현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 문국현을 범여권 후보라고 단정하고 그것이 한계라고 하기보다는 그의 계급 기반과 정책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전문기

온라인에 실린 '미국은 왜 북한을 악마화해 왔는가' 기사를 쉽게 잘 읽었다. 외국 언론에 실릴 글이어서 그런지 한국의 역사부터 친절하게 설명해 줬기 때문이다. <맞불>은 운동 참가자들이 읽는 신문인 동시에, 거리에서 진보적 주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하는 신문인 만큼 다른 기사들도 쉽게 씌어졌으면 한다.

김지현

'문국현과의 가치연정은 불필요하다' 기사는 지지층을 투표층과 조직 기반으로 나눔으로써 논의를 더 분명하게 하려한 것 같다. 그러나 왜 문국현의 당과 민주노동당의 조직 기반이 겹치지 않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고 있지 않아 모호했다. 조직 기반이라는 것은 그 당의 계급적 기반과 정치적 지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국현과의 '가치 연정'이 옳지 않은 것은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의 계급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국현과 어떠한 정책 연합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수진

'문국현과의 가치연정은 불필요하다' 기사는 문국현 지지층과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사실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는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연합 등을 통해 지지를 얻고자 했던 개혁 열망 세력의 일부를 지금 문국현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말이다. 나는 문국현 지지자들에게 '말 걸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현재 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가치 연정'이라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지지층이 겹치는 사실을 인식하고 진중하게 접근해야 왜 문국현이 진정한 진보를 대변할 수 없는지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기

정치 실천에는 전망이 필수적이다

62호 12면 '터키의 이라크 공격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핵심적인 예측 문제에서 우리를 헛갈리게 만들고 있다.

기사 도입부가 "터키의 이라크 북부 침략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는 반면, 기사 중간 부분에서는 "과연 터키가 이라크 북부를 당장 침략할지, 침략군이 이라크 쿠르드족 자치정부의 중심 영토까지 진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 아래에서는 "미국의 점령 파트너인 자치정부와 미국의 동맹인 터키군 간의 대규모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다시 터키의 침략 가능성을 강조하고, 터키 정부를 말리려는 부시 정부에게 "우리도 9·11 이후 미국처럼 행동할 권한이 있다"라는 터키군 고위 장성의 통명스런 답변을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조금 아래에서는 "물론 터키의 침공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

다" 하고 어조가 조금 바뀐다.

역사유물론자인 맑스주의자가 어떤 사건의 전망을 내놓는 것은 필수적이다. 마치 농민에게, 상습 침수지역 주민에게, 옥외 집회 조직자들에게, 그 밖의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일기예보가 중요하고 일기예보는 확률론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도 정치적 사건의 전망을 예측해야 하고 확률론적으로 그래야 한다.

확률론

터키군의 이라크 북부 공격이 과연 일상적이다시피 했던 이전의 월경(越境) 수준을 훨씬 넘는 침공 수준이 될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거의 또는 전혀 없다' 따위의 확률론적 언어로 표현되어야 한다.

지난 일요일 파병 연장을 둘러싼 KBS 심야토론에서 자이툰 부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터키군의 이라크 북부 침공 가능성 문제도 한 켠이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에서 예측은 중요하다. 특히 정치 실천에서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정치 실천은 자생적 운동에 단순히 동참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략과 전술에 바탕을 뒀야 하는데, 전략과 전술은 계획에 관한 것으로, 달리 말해 설계술이기 때문이다. 계획하고 설계하려면 전망을 내놓아야, 즉 예측해야 한다. 예측을 하려면 분석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먼저 터키 국가가 심각하게 분열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왜 터키 군부와 우익은 침공을 원하는지, 그럼에도 에르도간 총리의 정의개발당 정부와의 역학관계상 그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지 등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사가 씌어져야 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론 마굴리스의 온라인 기사와 비교되는 아쉬운 대목이다.

최일봉

정규직 · 비정규직 단결만이 살길이다

나는 10월 27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 대회에 참가했다. 이 집회에서 특히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 김진경 분회장의 연설이 인상적이었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려 한다.

"2003년 서울대병원 분회는 간병인 노동자 1백 명을 해고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우리는 간병인 노동자들과 함께 인권위 · 노동청 농성 등 생사고락을 함께했고 2004년 4월 간병인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지금은 서울대병원노조와 간병인노조가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

"2006년 초에 서울대병원 하청업체인 성원개발의 어용노조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는 성원개발 노동자들과 연대해 2006년 말 민주노조를 만들었고 성원개발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는 대체인력 거부 투쟁을 하면서 정규직 · 비정규직 공동 투쟁을 만들어 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분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과모임을 했다. 사측이 '비정규직은 공채를 안 봤다'며 정규직을 흔들었지만 우리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쳤다.



정규직 · 비정규직 단결로 승리한 서울대병원

"파업 6일 만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2년 미만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받아 냈다.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아름다운 연대'는 노동자 스스로 몰락하는 길이다. 정규직 · 비정규직 단결 투쟁으로 자본에게 빼앗아야 한다."

성향아

망신당한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 버시바우가 10월 24일과 25일, 각각 한국외대와 서울시립대에서 특강을 했다. 버시바우는 이를 동안 특강을 한 두 대학 모두에서 그의 방문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수모를 겪었다.

각 학교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버시바우 방문에 반대하는 항의행동을 계획했다.

강연회 당일, 학생들은 강연장 출입구에서 영어 팻말을 들고 "Stop the war", "No to FTA", "주한미군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립대 특강에서 버시바우는 "이라크 전쟁은 대량살상무기 해체나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과 석유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키는 성과가 있었다"며 말을 얼버무렸다.

구병준

자기 배만 채우려는
구의원들

10월 29일 송파구 구의원 의정비 심의위원회 4차 회의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송파구의원들의 2007년 연봉(의정비) 3천7백20만 원이 적다며 2008년도 의정비를 5천7백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 평균연봉 2천4백만 원의 갑절이 넘는 금액이다.

지난 6월 30일 송파구청이 수 년 동안 성실히 전화민원안내를 해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할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자들이 구의원 연봉은 자그마치 2천만 원이나 올린 것이다.

송파구의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시민 · 사회 · 노동단체들이 연대해 의정비 인상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경찰 비호하에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파구는 물론이고 모든 지방의회에서 추진중인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임미영

정규직양보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최근 제천시지역위원회 당원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의제를 대선에서 전면내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나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정규직 양보론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 가운데 일부를 비정규직 기금으로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규직 양보론을 받아들여서는 비정규직 철폐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안우춘

식품 가격 인상의 진정한 피해자들

[편집자 주] 다국적기업들의 이윤과 바이오연료 산업 때문에 전 세계에서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에서도 지난 9월에 밀가루 가격이 최고 15퍼센트 인상돼, 라면과 빵 등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영국 던디 대학의 기업·경제사 강사인 카를로 모렐리는 이런 물가 인상 때문에 빈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가게에서 식품 가격이 오른 것을 눈치챘는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식품 가격이 싸다는 말을 들어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지난해 중반 이후 식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집값을 제외하면 지난해 하반기에 가격이 가장 급등한 상품이 바로 식품이다.

영국에서는 12개월 만에 빵 가격이 15퍼센트 올랐다. 리서치 회사인 TNS월드패널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2개월 사이에 슈퍼마켓의 우유 가격은 11퍼센트, 달걀은 거의 18퍼센트, 버터는 5퍼센트, 육류는 6퍼센트씩 올랐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쌀·밀·콩·야자유·분유 등 다양한 상품의 가격이 꾸준히 올랐다.

1년 사이에 밀 가격이 거의 갑절로 뛰자, 밀을 주식으로 이용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지난 50년 동안 가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비중은 계속 하락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이 바뀌고 있다. 식품 가격이 소득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고, 이 경향은 이제 막 시작됐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바이오 연료

세계 식품 가격 급등에는 두 가지 요인이 얹혀 있다. 첫째, 점점 더 많은 토지가 공업용 작물 재배지로 전환되면서 식량 경작지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전에는 식용 작물 재배에 사용되던 토지가 성장하는 바이오연료 시장을 겨냥한 작물 재배지로 바뀌고 있다.

많은 기업과 정부들이 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연료를 앞다퉈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연료 생산의 대폭 증가로 환경과 인간이 입을 피해를 비판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

바이오연료 산업은 기록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세계 밀 재고량은 30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 <가디언>에 실린 존 비달의 기사를 보면,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 공화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토지 약 14억 에이커가 바이오산업용 작물 재배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토지가 식용 작물 재배지에서 바이오연료용 작물 재배지로 바뀌는 것

은 노골적인 자본주의의 논리를 여실히 보여 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투자한다. 그 결과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말이다.

다국적기업

식품 가격 인상의 둘째 요인은 식품 산업에 대한 서방 대기업들의 막강한 지배력이다.

세계 최빈국들은 국민총생산의 가장 큰 부분이 농산물 수출인 반면, 고부가가치 농업 제품을 대부분 수출하는 나라는 선진국들이다.

올해 초 식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멕시코 시위대

따라서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농부들이 아니라 선진국의 제조업자들과 소매상들이다. 확실히 식품 가격 인상은 그들의 수익성에 보탬이 된다.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이 12퍼센트였고, 영국 최대의 식품 소매업체인 테스코(Tesco)의 매출액 증가율은 19퍼센트였다.

그들은 식품 시장을 지배할 뿐 아니라 자신의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그래서 2005년에 테스코는 대만의 테스코 매장들을 프랑스 소매업체 까르푸에 넘기고 동유럽에 있는 까르푸 매장들

을 넘겨받았다. 그리고 지난주만 해도 영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이 유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에 의해 고발됐다.

이런 변화들은 선진국 소비자들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빈민들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미국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는 이미 모든 대륙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2025년쯤 되면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8억 명이나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에 시달리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농업은 세계 전체에서 신선한 물의 약 70퍼센트를 소비하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최대 95퍼센트까지 소비한다.

따라서 식량 재배지를 연료용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것은 식량 획득과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물 사용에도 훨씬 더 심각한 압박을 가할 것이다.

저항

그 결과로 굶주림, 기아, 물 부족이 만연할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은 주변에 곡물과 물이 넘쳐나는데도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결코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빈민들은 그렇지 않다. 식품 가격 인상은 세계 전역에서 거둑거둑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올해도 인도에서 다국적 차(茶)회사들에 맞선 항의 시위가 있었고, 파키스탄에서 네슬레의 노조 파괴 책동에 반대하는 투쟁이, 중국에서 월마트에 반대하는 투쟁이 있었고, 멕시코에서 식품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많은 개발도상국 빈민들의 이런 운동은 세계 식품 산업 부문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 운동들은 세계 식품 산업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결코 전능하지 않다는 것과 세계 농업의 방향이 결코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더욱이, 그런 운동들은 자본주의의 환경 파괴에 맞선 도전과 식품 가격 인하 투쟁을 통해 국제 노동계급을 단결시킬 수 있다.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파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소식/보고

11월 4일(일)까지 지역과 대학, 작업장의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화물연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경찰이 지난 20일 망향휴게소에서 벌어진 우발적 충돌을 빌미삼아 화물연대 조합원 5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보수언론은 건수잡은 듯이 “불법 폭력을 뿌리뽑자”고 선동했다.

그러나 진정 악질적인 폭력배는 망향휴게소 사측이다. “노조를 근본적으로 없애라”는 대표이사 엄정옥은 욕설, 폭행, 집단런치, 성희롱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40대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사측은 용역강패들을 고용해 “소리 소문도 없이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노조위원장의 집 안에서 목과 다리가 부러진 인형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폭력 탄압 속에서 노동자들은 외주화 철폐와 부당징계 철폐, 주5일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반년 넘게 투쟁해 왔다. 장거리 운행중 망향휴게소를 이용하며 각별한 연대 의식을 갖고 있던 화물연대 동지들은 10월 20일 화물철도 공동집회 후에 망향휴게소를 연대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이 채증하듯 노동자들을 감시·촬영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사측은 이것을 빌미삼아 마지못해 나오던 교섭을 중단했고, 경찰은 망향휴게소 조합원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은 충돌 과정에



서 비켜서 있었는데 말이다. 이런 비열한 보복은 중단돼야 한다.

사측의 도발에 우발적으로 대응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비난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사측이 저지른 온갖 폭력에 대해서는 못 본 척하던 경찰이 노동자들에게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겨운 일이다.

저들의 강경 대응에는 11월 화물·철도 공동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미 서울우유 등 일부 지부가 파업을 시작했고, 건영화물지부는 파업 보름 만에 승리를 쟁취했다. 저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화물·철도 공동투쟁을 확대한다면,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박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이랜드 투쟁 지지 연대 파업

“연대파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10월 24일 전주노동사무소 앞에서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지역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이랜드 투쟁 승리’와 ‘비정규직 악법 폐기’를 외치며 3킬로미터 떨어진 흙예버 전주점까지 가두 행진을 했다.

마침 대박세일을 하며 매출 부진을 만회하려던 흙예버 전주점은 헛물만 컸고, 수많은 시민들은 아직 이랜드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각인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지역 사회단체들은 지난 여름부터 ‘비정규직 차별철폐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싸워 왔다. 이번 파업은 이런 공동 투쟁의 성과였다.

연대파업이 처음 제기된 것은 8월말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표자 수련회에서였다. 뉴코아·이랜드 투쟁에서 희망을 본 활동가들이 전북 최초의 지역 연대파업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신동진 본부장은 “안 될 것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그러

나 “이번 파업은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 속에 희망을 가져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선전국장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파업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병무

파병 연장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활동

10월 25일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대학생 ‘다함께’, 2005년파병반대단식동지회, 전국학생행진(전), 한국대학생문화연대(가나다순)가 공동으로 파병 연장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가랑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13명의 대학생들은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 제작한 유인물 9백여 장을 나눠주며 파병 연장 반대 서명을 받았다.

안병문을 석방하라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하다 구속된 안병문 동지 석방을 위해 뉴코아·이랜드 공대위는 각계 인사들에게 “안병문 석방 촉구 탄원서”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외 민주노동당 의원 7명, 김형탁 대변인, 김성진·김은진·홍승하 최고위원, 정종권 서울시장 위원장, 민주노총 허영구·주봉희 부위원장,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과 장석주 지도위원, 뉴코아노조 최호섭 사무국장, 정인열 코스콤비정규지부 부지부장 등 수많은 인사들의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뉴코아·이랜드 공대위는 11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뉴코아·이랜드 투쟁 탄압 중단과 안병문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안병문 동지 선고 공판

11월 8일(목)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407호

오정숙

대학생 주권 회복 집회

10월 27일 서울 북부지구대학생 연합과 서울지역교대위 주최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생 자치권 탄압 중단, 사립학교법 재개정 규탄 — 대학생 주권 회복 집회’가 열렸다. 고려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30여 명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

고려대 출교생 김지윤 동지는 “투쟁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 학생, 교수,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싸워 승소를 얻어냈다.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자”고 말했다.

동덕여대 동아리연합회장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 공공성 보장하라”고 외쳤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이명박을 겨냥해 “한글도 제대로 못 쓰면서 영어로 수업하자고 말하는 대통령 후보는 의심스럽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등록금 때문에 학교 못가는 것을 막아 주는 대통령”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안형우

지역 사회포럼

부산
세계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연사 : 이정규(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일시 : 11월 8일(목) 8시
장소 : 토즈(서면 마리포사 4층)
참가비 : 2천 원
문의전화 : 018-552-7696

대학 맑스주의 포럼

경희대·한국외대 포럼
불안정한 세계 경제
-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일시 : 11월 7일(수) 6시 30분

문의 : 011-9937-1755

서부대학통합포럼
기후변화 - 위기에 처한 지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연사: 김중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대기과학과 박사과정)
일시: 11월 7일(수) 6시30분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151호
문의: 010-6890-8796

성공회대
불안정한 세계 경제
- 위기의 근원은 무엇인가?
연사: 정종남(투기자본 감시센터 기획국장)
일시: 11월 8일(목) 7시
장소: 나눔관 5A202호
문의: 016-695-5141

건국대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
연사: 김은영 ('파병반대국민행동' 활동가)
일시: 11월 8일(목) 6시30분
문의: 011-1737-2177

강원대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 제국주의의 위기
일시: 11월 7일(수) 7시
장소: 생활도서관(석재 5층 카페 안쪽)
문의: 010-9292-5963

고려대
남북 정상선언 이후 한반도
- 항구적 평화는 가능한가?
연사: 한규한 (주간[맞붙] 기자)
일시: 11월 8일(목) 6시30분
문의: 010-5162-5619

존 몰리뉴의 실천가들을 위한 맑스주의 입문 ②8

맑스주의는 경제결정론인가?



맑스주의가 “경제적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비판은 학술 세계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론적 반박이다. 사회학자·역사가·정치철학자 등이 이런 주장을 널리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 자신의 필요에 딱 맞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사상으로 먹고사는, 또는 먹고산다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상의 역사적 구실을 경시하는 듯한, 따라서 자신 같은 사람들의 구실을 경시하는 듯한 이론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직업적 이데올로그가 사상의 힘이 결국은 세상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에 끌리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는 더 협소한 직업적 이해관계도 얹혀 있다. 즉, 직업적 이데올로그는 “정교하고” “복잡한” 이론이나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 따라서 많은 연구 자금과 출판 기회가 뒤따르는 — 문제들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분명한 주장을 매우 싫어한다. 청년 맑스는 “공산주의는 역사의 수수께끼가 해결된 것이고, 스스로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썼다. 그러나 수수께끼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를 원하는 전형적인 학자는 맑스의 주장에 기겁할 것이다.

이것이 맑스주의에 대한 반박이 유행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반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는 맑스주의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거나 맑스주의는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한다는 주장이 모두 틀렸거나, 기껏해야 ‘부정확하다’는 말로 시작하고 싶다.

《독일 이데올로기》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맑스 역사 이론의 출발점은 ‘경제’나 ‘경제적 동기’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 — 생물학적으로 결정되고 역사적으로 발전된 — 와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의 조직화이다. 맑스는 생산의 조직화가 역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단지 생산의 조직화가 토대나 기초이고 역사에서 다른 모든 것은 이 토대나 기초에 의존한다고 주장했다를 뿐이다.

필요

더욱이 맑스주의의 이 근본 입장은 진리임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음식과 집 등을 구할 수 없는 인간은 모두 죽을 것이고, 사회 성원 다수의 필요를 적어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사회적 생산을 조직할 수 없는 사회는 결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맑스가 말했듯이, 이런 전제조건을 부인하는 것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 지배계급과 그들의 이데올로그 들은 그런 전제를 회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들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킬 물질적 노동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그 다른 사람들(노예·농민·노동자)을 사회적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한다는 말과 비슷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필요는 다양하다. 그것은 공기처럼 아주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것부터 그보다 약간만 덜 절박한 음식·옷·집 같은 것까지,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보살핌·언어·사회화 등)과 사랑과 섹스(둘 다 인류의 생존과 개인의 정서적 교감을 위해 꼭 필요하다)와 미술·음악 등을 위한 ‘정신적’ 필요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런 필요 중에서 어느 것이 ‘경제’에 해당하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공기가 ‘경제적’ 필요인가? 그와 동시에 경제, 즉 생산의 사회적 조직화가 없으면 이런 필요 가운데 공기를 제외하고(사실, 공기조차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느 것도 지속적으로 충족될 수 없다. 예컨대, 물질적 생산이 없으면 미술도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술을 위해서는 벽·종이·화포(畫布)·연필·붓 등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미술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할 사람들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직화된 생산이라는 이 경제적 토대와 맑스가 ‘상부구조’라고 부른 정치·법률·철학·종교·예술 등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경제가 다른 모든 것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경제가 모종의 기계적이거나 절대적인 의미에서 다른 것들을 결정할까? 맑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맑스는 주로 경제가 다른 것들을 조건짓거나 그 형태를 좌우한다고 했지 엄밀하게 결정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 토대가 상부구조를 조건짓는다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제약하기도 하고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제약

첫째, 사회의 경제 수준이 이데올로기나 상부구조 수준에서 가능한 것을 제약하거나 제한한다. 예컨대, 현대 예술과 현대 문화 일반이 봉건적인 또는 중세의 경제적 토대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현대의 정치적 민주주의 — 의회제 정부, 보통선거권 등 — 도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와 노동계급의 발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둘째, 경제 발전은 변화의 강력한 동력

을 만들어낸다. 예컨대, 봉건제 태내에서 초창기 부르주아지의 발전은 개신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를 성장시킨 동력이었다. 그래서 개신교는 가톨릭과 봉건 귀족의 동맹에 도전하게 된다. 이와 비슷하게, 나중에 산업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하자 제국주의 — ‘거대’ 열강들끼리 세계를 분할하는 — 를 향한 매우 강력한 동력이 형성됐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압력을 만들어냈다.

불확실

따라서 종교개혁이든 제1차세계대전 이든 그것은 우연한 역사적 사건도 아니었고 주로 이데올로기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사건들은 중대한 ‘경제적’ 원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에서 비롯한 원인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박는 것이나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된 뒤 1914년 8월에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난 것 등은 결코 경제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역사적 방법을 오늘날의 문제, 예컨대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적용해 보자. 한편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매우 강력한 동력이 존재한다. 세계 경제 제국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미국은 군사적 지배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적 지배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재앙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전에 이란에서 한판 크게 벌여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은 유혹이 생겨났다.

그러나 근본적 제약 조건들(미국도 어쩔 수 없는)과 함께 이란에서 군사적으로 패배할 현실적 가능성, 중동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위험, 국내외에서 대규모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 등 수많은 복잡한 요인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란 공격의 원인과 동기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것이지 이데올로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란 공격이 순전히 경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불확실하다.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정치·군사 지도자들의 판단과 성격, 중동과 미국과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강력한 저항 같은 요인들에 달려 있을 것이다.

존 몰리뉴는 《마르크스주의와 당》(북막스),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무엇인가?》(책갈피),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의 저자다.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박는 마르틴 루터 — 봉건제 태내에서 발전하던 자본주의가 종교개혁에 반영됐다

강력한 반전 행동으로 기성정치를 뒤엎자



노무현이 기상천외한 궤변으로 사기치면서 이라크 파병 연장 의사를 밝히자, 이 문제가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떠올랐다. 국방장관 김장수는 “철군하면, 실컷 불고기 사 주고 콜라 한 잔 안 줘서 [미국을] 서운하게 만드는 격”이라며 구역질나게 노무현을 거들었다.

이명박은 일관된 친제국주의·부시 풀마니 후보답게 곧바로 확고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이툰 부대는 기름밭 위에 앉아 있다”며 파병 연장을 통해 석유 자원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이라크인들의 피와 한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맞바꾸자는 것이다. 시체더미 속에서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생각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천박하게 드러내기도 힘들 텐데 말이다. ‘평화’와 ‘생명’ 같은 가치는 이명박에게 안중에도 없다.

한미FTA에 이어서 이라크 파병 연장을 위한 노무현과 이명박의 ‘대연정’은 범여권이 말하는 ‘반한나라당 전선’의 무가치함을 보여 준다.

정동영은 조금 망설이다가 파병 연장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술가락 들 때만 나타나고 설거지할 때는 사라지”는 기

회주의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참여정부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노무현과 화해를 추구하던가 갑자기 파병 문제에서 선긋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동영은 열우당 의장이던 2003년과 2004년에 앞장서 이라크 파병을 추진했고, 그 뒤에도 줄곧 정부의 파병 연장에 동조해 왔다. 2003년에는 자기 홈페이지에 ‘나는 왜 파병에 찬성하는가’라는 글을 올렸고, 2004년 2월 6일에는 “파병동의안이 처리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국회에서 연설까지 했다. 그래서 이인제도 “선거 전술상의 잔꾀”라고 정동영을 비웃었다.

‘친노’

통합신당은 파병 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여지껏 전체 의원 1백41명 중 71명만이 파병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성태, 유재건, 조정태 등 ‘실용파’들은 확고한 파병 연장 지지 입장을 갖고 있고, 유시민 등 ‘친노’ 의원들이 파병 연장을 지지할 가능성도 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파병 연장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동영과 통합신당 지도부는 생색만 내면서 내심 파병연장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을지 모른다. 이들은 지난해에는 파병 연장에 반대할 듯하다 막판에 뒤통수를 쳤다.

문국현은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동티모르의 사례와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 파병에 대해서는 찬성해 왔다”거나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가서 큰 사고 없이 국제 평화에 크게 기여한 것은 높이 쳐줄 수 있다”는 등 일관성 없는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안에 일관되고 확실한 파병 반대 세력은 권영길 후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반전평화의원모임에 속해 있는 의원 개인들뿐이다.

그나마 정동영 등이 파병 연장 반대 입장을 취하도록 만든 것은 강력한 반전 여론 덕분이다. 반전 운동은 반전 여론을 울곧게 대변하면서 이번에는 말로 파병 연장을 막아낼 수 있도록 큰 세력을 형성해야 한다. 국회에서 반전 운동 세력은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을 중요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

조명훈

“정규직 · 비정규직 하나 되는 투쟁을 만들자”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사기친 노무현 집권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려 1백9만 7천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전후인 지난 1년간에만 24만 6천 명이나 증가했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기간제는 줄어든 반면 더 열악한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더 늘었다. 비정규직 악법이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한 데다, 사장들이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외주화한 결과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는커녕, 대량 확대·악상했다는 점이 정부 통계로도 입증된 것이다.

지난 10월 27일 열린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는 뉴코아·이랜드, 코스콤을 비롯해 사내하청,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 명이 결집했다. 공공·금융·공무원 등 정규직 노동자들도 대열을 꾸려 이 집회에 함께했다.

집회에서 “정규직 · 비정규직 하나 되는 투쟁을 만들자”고 호소한 뉴코아 최영호

조합원의 주장은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김경욱 이랜드노조 위원장도 “국민의 75퍼센트가 지지하는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겠다”고 다짐했다.

박대규 전비연 의장은 대회사에서 “용역깡패가 판치는 세상, 경찰이 노동자를 두들겨 패는 세상이 과연 법치국가인가”하고 속시원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두들겨 패고 있다. 이를 뭐라 하는 상급단체도 없다. 나쁜 놈들이다”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싸잡아서 비판하기 보다는 정규직 연대를 고무하고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게 투쟁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일부 작업장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분노는 공감하지만 정규직의 연대가 확산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10월 24일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랜드 투쟁을 지원하는 지역 연대 파업을 조직했고,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11월 27일 이랜드 연대 간부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



10월 27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

총 이석행 지도부도 노동자대회 전야제를 흠메비 상암장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장본인인 국회의원들조차 “이랜드는 부도덕한 악덕 기업주”라고 목청을 높일 만큼 여론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투쟁을 결연하게 이어 나가고 있다. 이랜드노조는 투쟁 기금 부족으로 채권 발행을 시

작했다.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은 10월 29일 새벽 사강실 기습 점거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부수며 소화분말을 뿌리는 용역깡패들과 경찰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며 끌려 나왔다.

11월 11일 범국민행동의날을 발판삼아 비정규직 투쟁 승리를 향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강력한 단결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오정숙